

[별 첨]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

2019. 5. 3.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I. 추진 배경	1
----------------	---

II. 금융행정지도 정비 방안	2
------------------------	---

1. 금융행정지도 정비 계획(총괄)	2
---------------------------	---

2. 유지 필요 행정지도 세부내용	4
--------------------------	---

III. 향후 계획	7
------------------	---

[참고] 금융행정지도 전체 현황	8
-------------------------	---

I. 추진배경 및 경과

- 행정지도는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

■ “금융행정지도”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금융규제 운영규정)

-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불이행하여도 불이익한 조치는 금지
 - 행정지도 제·개정 시 사전 의견청취 및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제·개정 후 전산시스템 등록·공개
 - 유효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되나, 명시적 규제료 전환 위해 법령 제·개정을 추진 중인 경우 2회 이상 연장 가능
- '15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후, 최근 행정지도의 관행적 연장 및 행정지도 전수 감소 정체 등으로 재점검 필요성 제기

* ('14년) 약 700건 → ('15년) 50건 → ('16년) 39건 → ('17년) 45건 → ('18년) 39건

- 이에,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행정지도 존속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검토 실시('19.1~3월)
 - (Bottom-up) 금융위·금감원 소관부서 공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업권 의견을 수렴
 - (Top-down) 업권의 의견이 없는 행정지도를 포함해서, 전체 금융행정지도에 대해 Zero-Base에서 존속 여부 검토
- 금융위·금감원 공동으로 행정지도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 음부즈만 회의에서 정비계획에 대해 심의(4.4일)

Ⅱ. 금융행정지도 정비 방안

1 금융행정지도 정비 계획[총괄]

- 총 39건의 금융행정지도(금융위 12개·금감원 27개, '18년말 기준) 중
 ① 폐지 8건, ② 법제화 후 폐지 22건, ③ 유지 필요 9건
- '금융위' 행정지도는 총 12건으로, 이 중 ① 3건은 폐지하고,
 ② 9건은 법제화 후 폐지 등 모두 정비
- '금감원' 행정지도는 총 27건으로, ① 5건은 폐지, ② 13건은
 법제화 후 폐지, ③ 9건은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행정지도 정비 검토결과 >

구분	현행	폐지	법제화 후 폐지	유지
금융위	12	3	9	-
금감원	27	5	13	9
계	39	8	22	9

- (폐지) 8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의 목적달성 또는 법제화가
 완료되어 명시적규제로 既 전환 등의 사유로 폐지

[금융위 행정지도 (3건)]

-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 업무해설서 성격
-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 업무해설서 성격
- 신탁형 ISA 계약의 체결·운영 관련 행정지도 → 관행 정착

[금감원 행정지도 (5건)]

-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관련 유의사항 → 既 법제화/상호금융업권은 법제화 후 폐지
- 상호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관련 행정지도 → 既 법제화(감독규정)
- 상호저축은행의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취급 관련 유의사항 → 관행 정착
-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은행) → 既 법제화(감독규정)
-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 관행 정착

- (법제화 후 폐지) 22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 법제화를 추진하고, 법제화 이후 행정지도 폐지

[금융위 행정지도 (9건)]

- 투자일임형 ISA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관련 행정지도
-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 억제에 위한 모범규준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 경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취급제한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 AML/CFT 관련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접근법 처리 기준

[금감원 행정지도 (13건)]

-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기준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행정지도
-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투자자 숙려제도 및 자가진단표 시행방안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보험)
-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저축은행)
-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여전)
- P2P대출 가이드라인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관련 보고서식 제정에 따른 행정지도
-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 (유지) 9건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유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금감원 행정지도 (9건)]

-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 (보험)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금융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LTV 기준 세부 추진방안
- CD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 국제·지방세·4대보험 카드결제 관련 비정상적인 이익제공 유의사항 안내
- 불법금융행위 예방을 위한 범금융권 공동홍보 협조요청

2 유지 필요 행정지도 세부내용

(1)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15.8월~)

- (주요내용)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매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목표 비율을 설정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질적구조개선 목표 및 실적 >

(단위 : %)

구 분	'11말	'12말	'13말	'14말	'15말	'16말	'17말	'18말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중목표)	7.7	13.9	18.7	26.5 (20)	38.9 (35)	45.1 (45)	49.8 (55)	51.6 (55.0)
고정금리 (연중목표)	3.1	14.2	15.9	23.6 (20)	35.7 (35)	43.0 (40)	44.5 (45.0)	45.0 (47.5)

- ⇒ (검토결과)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및 분할상환 관행 정착을 지속 유도하여, 금리상승·주택가격 하락 등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행정지도 유지 필요

(2)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보험) ('14.4월~)

- (주요내용) 보험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매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목표 비율을 설정

<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질적구조개선 목표 및 실적 >

(단위 :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목표 (17년말)	실적 (15년말)	목표 (17년말)	실적 (16년말)	목표 (17년말)	실적 (17년말)	목표 (18년말)	실적 (18년말)
고정금리*	-	-	25.0	23.8	30.0	35.3	40.0	43.9
분할상환	40.0	33.5	45.0	42.1	50.0	52.6	55.0	59.5

* 고정금리 목표비중은 '16.12월에 도입

- ⇒ (검토결과)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및 분할상환 관행 정착을 지속 유도하여, 금리상승·주택가격 하락 등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행정지도 유지 필요

[3]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14.4월~)

- (주요내용)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 목표('19년말 30%)를 설정

*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비중 추이(%) :

('14년말) 2.8 → ('15년말) 4.4 → ('16년말) 7.4 → ('17년말) 16.3 → ('18년말) 25.5

- ⇒ (검토결과)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및 분할상환 관행 정착을 지속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51.6%, '18년말 기준) 수준으로 상향 될 때까지 분할상환 목표비중에 대한 행정지도 유지 필요

[4] 상호금융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LTV 기준 세부 추진방안('15.11월~)

- (주요내용) 비주택부동산(토지·상가 등) 담보대출시, 지역별·담보별 평균 경락가율에 따라 LTV 한도를 최저 40% ~ 최대 70% 적용

< 상호금융 가계 비주택담대 LTV 조정 내역 >

구 분	기 준	행정지도 시행 (‘15.11.1.)	1차 연장 (‘16.10.31.)	2차 연장 (‘17.10.31.)	3차 연장 (‘18.10.31.)
LTV 총한도	80%	80%	70%	좌동	좌동
기본비율 최저한도	60%	50%	40%	좌동	좌동*
가산비율 한도	+15~20%p	+10%p	+5%p (분할상환시 +10%p)	좌동	좌동

* 기본비율 산정시 최근 5년간 지역별·담보종류별로 기간별 가중평균 경락가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최근 5년간 단순평균 경락가율과 비교하여 선택 적용

- ⇒ (검토결과) 행정지도 폐지시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어 행정지도 유지 필요

※ 다만, '19.2분기중 상호금융권에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DSR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행정지도 유지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

[5] CD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12.8월~)

- (주요내용) CD시장 형성 및 CD금리 산정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원화시장성CD 발행의무* 부과

* 할당액 : 각 은행별 CD금리 연동대출 잔액의 1.19% 이상 발행(총 2조원 수준)
(3개월물이 지표금리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50% 이상을 3개월물로 발행)

- ⇒ (검토결과) CD금리는 대출 등의 지표금리로 주요하게 활용되므로, CD금리의 안정적 산출을 위해 행정지도 유지 필요

※ '18.5월 예대율 산출시 인센티브 부여(CD발행액 1%까지 예금에 포함)로 CD발행액이 행정지도 수준 초과 → 추후 행정지도 유지 여부 검토 예정

[6]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17.12월~)

- (주요내용) 소비자의 '건강관리노력 및 생활습관 개선'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위한 기준 제공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설계기준, 보험편익 제공,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편법운영 등 보험시장질서 교란행위 사전 차단 등

※ '18.8월말 현재 총 7개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중이며, 보유 계약 건수: 23.3만건, 누적보험료: 639.8억원 수준

- ⇒ (검토결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보험사고 감소 등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이 기대되므로 유지 필요

[7]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18.11월~)

- (주요내용) 보험사기 예방을 통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업무단계별 보험사기 유발요인 통제 장치* 마련

* 상품개발시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계약심사시 보험가입한도 관리, 모집조직 관리 및 교육, 보험사기 조사 남용 방지 등

- ⇒ (검토결과) 사후 적발로는 소비자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어 모범규준을 통한 사전 예방 장치가 필요

* 동 모범규준이 시행('18.11월)된지 아직 6개월 미만으로, 관행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향후 감독 규정 반영 등 제도화 여부 검토 예정

[8] 국세·지방세·4대보험 카드결제 관련 비정상적인 이익제공 유의사항 안내('18.3월~)

- (주요내용) 신용카드로 국세·지방세·4대 보험 결제시 과도한 경제적 이익(기한의 이익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
 - * 국세·지방세 카드납부 관련, 주로 법인회원에게만 수수료 면제 및 별도 이익을 제공하여 대형법인회원과 여타 회원간 차별대우 문제 발생
- ⇒ (검토결과) 특정 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경영 상태 부실 가능성 및 신용카드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여전법 제24조의2)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지도 유지 필요

[9] 불법금융행위 예방을 위한 범금융권 공동홍보 협조요청('16.3월~)

-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피해규모 증가 등에 대응하여 불법금융 행위 예방을 위한 범금융권 홍보TF 협조 요청
- ⇒ (검토) 범금융권 공동의 홍보TF를 통해 대국민 홍보 협조를 요청하는 非규제적 성격의 행정지도

Ⅲ. 향후 계획

- 폐지 대상 행정지도(8건)는 원칙적으로 '19년 6월말까지 모두 폐지
- 법제화 후 폐지 대상 행정지도(22건)는 조속한 시일내 법제화를 실시하여 명시적 규제로 전환 추진
 -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행정지도(17건)는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
 -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행정지도(5건)는 '20.8월까지 법제화를 모두 완료하고, 해당 행정지도를 폐지*

* '19년말까지 폐지 행정지도 4건, '20.8월까지 폐지 행정지도 1건

참 고

금융행정지도 전체 현황

□ 금융위원회 행정지도(12개)

구분	행정지도 제목	소관부서	시행일 (연장일)	유효기간	검 토
1	투자일임형 ISA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기준	자산운용과	'16.02.26. ('19.02.26.)	'20.02.25.	법제화 후 폐지
2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관련 행정지도	자산운용과	'17.07.01. ('18.07.01.)	'19.06.30.	법제화 후 폐지
3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자산운용과	'17.05.10. ('18.05.10.)	'19.05.09.	법제화 후 폐지
4	투자자문업 모범기준	자산운용과	'17.05.12. ('18.05.12.)	'19.05.11.	폐지
5	투자일임업 모범기준	자산운용과	'18.06.29.	'19.06.28.	폐지
6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 억제에 관한 모범기준	자산운용과	'16.02.05. ('19.02.05.)	'20.02.04.	법제화 후 폐지
7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자산운용과	'16.07.26. ('18.07.26.)	'19.07.25.	법제화 후 폐지
8	겸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취급제한	자산운용과	'17.09.07. ('18.09.07.)	'19.09.06.	법제화 후 폐지
9	신탁형 ISA 계약의 체결·운영 관련 행정지도	자산운용과	'17.03.09. ('18.03.09.)	'19.03.08.	폐지
10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기준	감독제도팀	'18.07.02.	'19.07.01.	법제화 후 폐지
11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FIU 기획행정실	'18.01.30. ('18.07.10.)	'19.07.09.	법제화 후 폐지
12	AML/CFT 관련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접근법 처리 기준	FIU 제도운영과	'18.12.18.	'19.12.17.	법제화 후 폐지

□ 금융감독원 행정지도(27개)

구 분	행정지도 제목	소관부서	시행일 (연장일)	유효기간	검 토
1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총괄국 (금융소비자정책과)	'16.01.01. ('19.01.01.)	'19.12.31.	법제화 후 폐지
2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총괄국 (금융소비자정책과)	'14.03.31. ('19.01.01.)	'19.12.31.	법제화 후 폐지
3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기준	감독총괄국 (금융소비자정책과)	'10.02.17. ('18.10.01.)	'19.09.30.	법제화 후 폐지
4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은행감독국 (금융정책과)	'15.08.21. ('19.04.04.)	'20.04.03.	유지
5	(보험)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보험감독국 (금융정책과)	'14.04.04. ('19.04.04.)	'20.04.03.	유지
6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상호금융감독실 (금융정책과)	'14.04.04. ('19.04.04.)	'20.04.03.	유지

구 분	행정지도 제목	소관부서	시행일 (연장일)	유효기간	검 토
7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금융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LTV 기준 세부 추진방안	상호금융감독실 (금융정책과)	'15.11.01. ('18.10.31.)	'19.10.30.	유지
8	CD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	은행감독국 (금융시장분석과)	'12.08.21. ('17.08.21.)	'19.08.20.	유지
9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보험감독국 (보험과)	'17.12.08. ('18.12.08.)	'19.12.07.	유지
10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보험사기대응단 (보험과)	'18.11.01.	'19.10.31.	유지
11	국세·지방세·4대보험 카드결제 관련 비정상적인 이익제공 유의사항 안내	여신금융감독국 (중소금융과)	'18.03.01. ('19.03.01.)	'20.02.29.	유지
12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관련 유의사항	저축은행감독국 (중소금융과)	'15.12.11. ('12.12.11.)	'19.12.10.	폐지
13	상호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관련 행정지도	저축은행감독국 (중소금융과)	'15.05.04. ('18.05.04.)	'19.05.03.	폐지
14	상호저축은행의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취급 관련 유의사항	저축은행감독국 (중소금융과)	'15.05.04. ('18.05.04.)	'19.05.03.	폐지
15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행정지도	저축은행감독국 (중소금융과)	'15.05.04. ('19.05.04.)	'20.05.03.	법제화 후 폐지
16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은행)	은행감독국 (서민금융과)	'13.05.24. ('18.05.24.)	'19.05.23.	폐지
17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보험)	보험감독국 (서민금융과)	'13.05.24. ('18.05.24.)	'19.05.23.	법제화 후 폐지
18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저축은행)	저축은행감독국 (서민금융과)	'13.05.24. ('18.05.24.)	'19.05.23.	법제화 후 폐지
19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여전)	여신금융감독국 (서민금융과)	'13.05.24. ('18.05.24.)	'19.05.23.	법제화 후 폐지
20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과)	'17.03.01. ('19.03.01.)	'20.08.31.	법제화 후 폐지
21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투자자 숙려제도 및 자기진단표 시행 방안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과)	'17.01.02. ('19.01.02.)	'20.01.01.	법제화 후 폐지
22	P2P대출 가이드라인	IT핀테크지원실 (금융혁신과)	'17.02.27. ('19.01.01.)	'19.12.31.	법제화 후 폐지
23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감독총괄국 (전자금융과)	'11.04.01. ('18.04.01.)	'19.03.31.	폐지
24	불법금융행위 예방을 위한 범금융권 공동홍보 협조요청	불법금융대응단 (전자금융과)	'16.03.18. ('19.03.17.)	'20.03.17.	유지
25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신용정보평가실 (금융데이터정책과)	'18.09.05.	'19.09.04.	법제화 후 폐지
26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신용정보평가실 (금융데이터정책과)	'18.04.24. ('19.04.24.)	'20.04.23.	법제화 후 폐지
27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관련 보고서식 제정에 따른 행정지도	금융그룹감독실 (감독제도팀)	'18.09.28.	'19.09.27.	법제화 후 폐지